

11.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3년 7월 7일
- 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3년 7월 10일
- 상정일자 :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2차 문화복지위원회(2023년 7월 21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정선 문화체육관광국장)

□ 제안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·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,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규정을 정비(안 제3조제4항)
-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(안 제4조제5호)

-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 반환기간 규정을 정비(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)
- 공공체육시설에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(안 제17조제1항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3조는 “지역주민 누구나”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정비함.
- 안 제4조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단체 및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 하도록 규정함.

현행	개정안
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. 각급 학교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.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<u>행사</u> 5. 경기연습·개인연습·체력단련 등의 <u>체육활동</u> 6.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·공연·전람·전시 등 행사 7. 그 밖의 경우	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 1.~4. (현행과 동일) 5. 경기연습·개인연습·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. <u>다만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.</u> 6.~7. (현행과 동일)

- 단체의 경기연습 등 체육활동을 조례 제4조의 4호 “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”로 확대해석하여 단체의 경기연습과 개인의 경기연습이 경합하는 경우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.

- ○○지자체에서는 5개 테니스 코트 모두를 특정 클럽들이 5일 먼저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국민들은 5일 뒤 남아있는 시간대 밖에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약시스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는 민원 발생.(19. 6월, 국민신문고)

- **안 제14조**는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반환 기한을 5근무일에서 3근무일로 변경함.

〈 이용료의 반환기준 〉

-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 준용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이용개시일 전	반환금액 = 이용료 + 위약금(이용료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)
이용개시일 이후	·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반환금액 = [이용료 - (이용료 × $\frac{\text{이미 경과한 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 이용 기간(일수)}}$)] + 위약금
	·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: 반환금액 = [이용료 - (이용료 × $\frac{\text{이미 이용한 횟수}}{\text{계약상 이용 횟수}}$)] + 위약금

- **안 제17조**는 공공체육시설에 홍보물(입간판, 현수막, 벽보 등) 설치를 금지하되,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, 이용자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다만,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이 증가 추세이고,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단체의 장기간 사용 및 예약 우선권 부여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0월에 공공체육 시설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음에도,

- 그 간 두 차례 조례 개정('20. 7월, '21. 12월)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으며,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령 정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음.
- 또한, 부대설비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홍보물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무분별한 입간판, 벽보, 현수막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체육 시설 사용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만큼 향후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겠음.



△△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출입구 및 건물 외부에 설치된 ○○클럽 간판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시설 체육시설로 오인하여 접근하지 못함에 따른 주민 불편 발생 ('19. 7월 권익위원회 실태조사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육상진흥센터가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.	향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논의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